

하루 100건...대중교통 '마스크 실랑이'

광주 무더위 속 승객들 마스크 착용 안해 버스·지하철 일단 갈등 폭언·폭행에 기사·역무원 골머리...경찰 4명 입건 등 엄정 대응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승객들로 인해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과의 마찰 때문에 다른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도 이어지는 만큼 경찰도 엄정한 대응 입장을 밝혔다.

특히 연이은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기피하는 승객들이 늘면서 광주지역 버스기사들은 날마다 승객들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버스기사·승객, '마스크' 옥신각신 매일 100건=25일 민조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버스기사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았음에

도 변명을 늘어놓으며 그대로 승차, 다른 승객들의 항의를 받는가 하면, 적반하장 식으로 화를 내며 시비를 거는 승객들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는 것이다.

민조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을 놓고 버스기사와 승객간 벌어지는 사소한 시비가 하루 평균 100여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지하철 역무원들도 비슷하다. '적반하장'식 노마스크족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정부 방침을 안내하며 "마스크를 써달라"고 하는데도, '꼭 해야하느냐'며 정색을 하거나, 샷대질에 고성까지 지르며 화

를 내는 승객들 때문에 매일 곤란한 상황에 놓인다는 것이다.

광주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역무원들이 마스크 착용 요구에 불응하는 막무가내 승객과의 마찰로 업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4가역에서는 지난 24일 오후 9시 30분께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역무원과 승객 간 거친 언쟁이 오가면서 경찰이 출동했고 광산구 지하철역에서도 23일 마스크 착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역무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마스크 폭력 엄정 대응=경찰도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따르지 않는 데 대해서는 엄정 대응키로 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대중교통 마스크 착

용 의무화 이후 버스기사와 역무원을 상대로 폭행·폭언을 한 혐의로 4명의 승객을 입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6시 5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모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타려다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제지하는 버스기사(60)의 팔을 강하게 뿌리쳐 부상을 입힌 혐의로 A(46)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북부경찰도 지난 21일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청하는 버스기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20분 간 버스 운영을 막은 40대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중이다.

남부경찰도 지난 20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시내버스 기사와 고소장을 토대로 피해 사실 확인이 나선 상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유방암 치료를 위한 난소절제수술도 암 직접 치료 수술...보험금 지급 대상”

법원 “보험사, 600만원 지급”

유방암 치료를 위해 받은 난소절제수술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 약관에서는 직접적인 암 치료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환자들의 보험료 지급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나주시법원 김동희 판사는 A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보험사는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소절제술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라고 판시했다. 유방암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소절제수술은 약물치료 등과 병행해 이뤄지긴 하지만 호르몬 영향으로 암이 증식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A씨는 광주지방변호사회가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중인 '민사소액사건 지원변호사제도'의 도움을 받았다.

민사소액사건은 소가(訴價)가 3000만원 이하인 사건으로, 광주지방변호사회는 서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에 대해 최소 수임료로 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사건을 맡은 광주지방변호사회 홍현수 변호사는 "보험사의 경우, 약관에 암수술에 대해 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해석하면서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면서 "A씨와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그림 대작' 가수 조영남 사기 혐의 무죄 확정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원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화가 송도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작품 21점을 17명에게 팔아 1억5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작업에 참여한 송씨를 조씨의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봤고 조씨의 '그림 대작'도 구매자들을 속인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화부를 소재로 한 조씨의 작품은 조씨의 고유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것이고 조수작가는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미술 작품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것인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수 작가를 고용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조씨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미술작품 거래에서 기망 여부를 판단할 때 위작 여부나 저작권에 관한 다툼이 있지 않은 한 가치 평가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법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판시했다.

검사가 이번 사건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사기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에 검찰의 상고 이유는 공소 사실과 무관하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중앙공원 비대위 시위 중앙공원1지구 토지소유주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풍암호수공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공영시설 면적 확대를 요구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지산주택조합 중복분양 사기 업무대행사 대표 등 2명 구속

광주시 동구 지산주택조합 사기 분양 사건과 관련, 경찰이 핵심 피의자 2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지산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조합측이 이 같은 다중계약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업승인에 자질이 벗어날 것을 우려, 방치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경찰 수사가 조합측으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이 아파트계약이 다중으로 하면서 76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속됐

다.

25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지법 김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지산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A씨의 경우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 B씨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조합원 자격과 저렴한 분양가 등을 약속하며 117명으로부터 아파트 계약 명목으로 76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

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3000만~8000만원 가량의 돈을 지정 신탁계좌가 아닌 개인 또는 과거 조합 추진위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거쳐 22명을 피의자로 입건, 15명에 대해서는 관련 진술을 확보한 상태로, 117명이 76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권리당원 불법모집 정종제 전 행정부시장 기소

광주시 공무원 등 5명도

정종제(57)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최재봉)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전 부시장과 광주시 공무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대비해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정 전 부시장을 위해 5000명이 넘는 당원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부시장이 현직 부시장 신분으로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출마를 염두에 두고 당내 경선에 대비,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고교 동문회나 향우회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당원을 모집한 것으로 봤다.

정 전 부시장은 동문이거나 친분이 깊은 B(56), C(59), D(58)씨와 공모, 1차 모집자 89명을 통해 5127명을 추가로 모

집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이들은 각각 지방선거 캠프에서 간부로 활동했거나 고교 총동창회장 출신, 체육계 출신이자 친선단체 간부로 활동 중이었다.

시청 공무원 D(53)씨는 정 전 부시장에게 부탁을 받고 자신의 부인을 통해 당원 105명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검찰은 정씨가 공무원 3명에게 부탁해 권리당원 137명을 모집하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모집 경위와 방법, 견수 등을 고려해 함께 입건된 공무원 4명과 나머지 산하 공기업 임원 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위해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입당 원서를 발견, 정 전 부시장 등 관련자 11명을 입건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www.yhbeco.co.kr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